

민주, ‘韓 출마론’ 연일 맹공… 시정연설 ‘침묵 항의’

당 지도부 “난국 만든 내란 대행”
“공직 이용 사리사욕 채워” 비판
역공 우려에 탄핵 재추진은 선국기
韓, 美 관세부와 등 입장 설명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끊임 없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설령 출마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는 대미 통상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 대행의 국회 시정연설 등이 한 대행의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되서는 안 된

다고 비판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공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짚금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대선출마용 연설로 규정한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은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졸속협상이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불모로 삼은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협상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도부도 한 대행을 겨냥한 견제를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단일화론”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노욕의 용꿈을 꾸던 고위 공직자들의 전례처럼 출마도 못하는 허망한 종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국가의 미래를 불모 잡아 대미 통상협상에서 졸속협상을 강행한다면 이는 미국을 이용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대선 스펙을 쌓기 위한 것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매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지금의 난국을 만든 내란 대행이다. 한 대행이 난국을 타개할 지도자라는 주장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했다.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단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 및 탄핵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민생

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정연설 전후나 본회의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출마 여부를 밝히려는 요구가 나올 경우 한 대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대선 경선 2차 토론회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민주, ‘李선거법’ 전합 회부에 “기각 결론 기대”

“이례적 절차” 공정 재판 촉구
“尹·김용현 재판 특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때는 즉시 항고도 안하고 풀어줬던 검찰이 더 볼 것도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 특

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전례 없는 특혜와 이례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유일무이하게 시간 단위로 구속을 취소했고, 지하 주차장 출석, 판사가 인정신문을 대독하는 등의 이례적인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과 노상원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해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특혜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 전 정부 인사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당내 비상설 특별 위원회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재선의 정일영 의원이 맡았다.

황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를 지속하면서 증거 인멸도 계속되기 때문에 빠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권향엽 ‘공항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23일 조류충돌예방 위원회를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류충돌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돼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



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대선 후보 경선 4강전… ‘반탄-찬탄’ 구도

‘50% 반영’ 당심 주목
양향자, 한동훈 지지선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탄핵소추 반대파’(김문수·홍준표)와 ‘탄핵소추 찬성파’(안철수·한동훈)의 팽팽한 2대 2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각의 지지층 결집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됐는데,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반탄파’였던 나경원 의원을 꺾고 4강에 진출한 것은 계엄·탄핵과 당내 ‘윤심’ 논란에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보수 지지층이 중도 확장성이 중요한 대선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2차 경선에서는 ‘찬탄파’ 주자들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과, 안·한동훈 후보의 표가 갈려 오히려 찬탄파의 결선 진출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2차 경선부터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된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관계 단절’에 부정적인 강성 당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당심 비중이 높아지는 이 같은 룰은 애



김문수(왼쪽부터),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손뼉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초 ‘찬탄파’ 후보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됐지만,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1차 경선 결과에선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 간 2대 2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2차 경선부터 반영되는 당원들의 표심이반탄파에 힘을 모아줄 것인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1차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했던 김·한·홍 후보는 과반 득표를 통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4강 진입에 성공한 안 후보의 경우엔 기세를 몰아 2강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1차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젊고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필요하다”며 “불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이번주 ‘더 센’ 내란 특검법 재발의

김건희·명태군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재발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무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를 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를 앞둔 강화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대상 범위와 수사 인력, 기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길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등에 있어 보다 확장적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와 국민의

힘을 겨냥한 특검을 몰아붙이며 대선 정국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에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명태군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정아 대변인은 “명태군,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를 곧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